

언론동향(9. 7.)

《언론보도 목차》

1. “교류협력의 끈 놓지 않고…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경기일보) 2
2. “남북 개성공단 반드시 열어야”... ‘재가동 촉구’ 커지는 목소리 (경기신문) 3
3. 내년 경기도체육대회 임진각서 '불꽃 열정' (경인일보) 3
4. 집에서 봐도 느껴지는 파주연천 생생한 생태현장 (경기신문) 4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가 남북화해협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합의 논리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관계 속에 평화부지사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5월12일 제2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한 뒤 그는 남북협력사업, 대북전단 살포 대책 등 현장을 누비며 한반도 통일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이 부지사는 경북 의성 출신이다. 부산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영국 런던 정경대 대학원에서 ‘시민사회와 민주화’ 관련 정치학을 공부하며 ‘한반도 통일과 정치문제’ 주제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을 맡아 한인사회 화합과 소통에도 힘썼다. 귀국 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근감사위원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비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제평화, 민주시민사회의, 인권, 경제 등 각 분야를 두루 거친 그가 평화부지사 취임자로서 적합한 이유다. 지난 1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직무실에서 이 부지사를 만나 취임 소감과 정책, 앞으로 목표 등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코로나19 감염예방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진행했다.

“교류·협력의 끈 놓지 않고…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Q 경기도민에게 평화부지사 직함이 생소할 수 있다. 직무에 대한 소개와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은.

A 경기도는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을 품고 있어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평화부지사라는 직함은 이러한 경기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화해 교류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 전국 지자체 중에 경기도만은 직책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직무에 임하고 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6·15' 2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 대북전단 살포 원천 차단, 대북 은실지원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과 같은 굵직한 성과를 이루어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통일경제특구, DMZ, 미군공여지 문제와 같은 도내 현안들을 해결해 경기도가 남북화해협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 하겠다.

Q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투자하고 있다. 그간의 정책과 성공한 (정책)사례는 어떤 것 이었나.

A 경기도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그간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8년에 전국 최초로 전담부서를 설치했으며 2010년 5·24조치 이후에는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인도적 지원과 스포츠 교류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어 있음에도 아시아 국제기구대회, 아시아 평화

후 주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Q 대북전단 살포도 남남 갈등이 있었다. 그러기에 남북교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 궁금하다.

A 남북교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평화분위기 구축을 위해 평화 토크콘서트, 평화음악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8·15 광복 75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공연과 토크쇼가 결합한 ‘평화토크쇼’를 개최했다. 최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공개좌담회’도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함으로써 남북관계 경제 국면에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도민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비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소통하진 못했지만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하고자 노력했다. 앞으로도 도민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 한반도 평화에 한발자국이라도 다가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Q 북한이탈주민이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도민과의 어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정책 성과는.

A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 전국 최대 거주지역으로 탈북민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탈



개풍양묘장 물자지원 UN 대북제재 면제 받아 민간단체 협조 없이 지자체 단독 승인 첫 사례 한반도 평화 위해 경기도식 대북지원사업 모색

토크콘서트·좌담회 열어 도민 공감대 형성 북한이탈주민 대한 인식개선·소통 정책 앞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할 남북교류협력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조우현기자

와 변영을 위한 국제대회’ 등을 북측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고 국내 최초 개풍양묘장 유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또 농촌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유엔은실 관련 UN 대북 제재 면제를 단독으로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는 지자체가 민간단체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면제 승인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다. 이처럼 경기도는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의 협조 아래 대화와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민선 7기 경기도가 지향하는 남북교류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은.

A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변영의 중심’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남북교류 및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협력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정, 평화, 복지를 도정의 3대 가치로 삼고 ‘한반도 평화와 변영의 중심’으로 적극적 평화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의 토대 위에 변영을 꽃피울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현재 남북관계 경제 국면으로 단기간에 남북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긴 호흡을 갖고 경기도식 대북지원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Q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남북교류 사업의 방향성을 재점검해야 할 것 같다.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지.

A 남북관계가 경제선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코로나19 예방협력사업, ASF 방역물품 지원 등 인도적 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의료 협력, 감염병가속연명·검정지역 해제개산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코로나19 이

북민과 도민들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통합과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돌봄상담센터 운영, 남북한가족 통일결연, 통일한마당, 사·군 소통화합사업, 남북한 문화격차 해소 등 다양한 소통·화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 2019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북한이탈주민 분야’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전담팀을 운영하며 지난 2009년부터 탈북민 출신 공무원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를 통해 매년 1천500여 건의 다양한 고충상담 및 원스톱 민원 해결로 정책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남북한가족 통일결연사업은 지역 내 남북한 가족결연과 가족이 함께 활동하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는 획기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조성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통일한마당’ 등 일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아쉽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전정되면 향후 지속적으로 남북한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Q 경기도의 노력으로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떤 의미인가.

A 이전에는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민간단체를 거쳐야만 대북지원 사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지자체 명의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으로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10월에 통일부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자체 특성을 살린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Q 이재명 지사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 남북관계를 풀아가는 해법으로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도의 독자 행보, 즉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 재정립 차원이 맞나.

A 남북교류협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동시에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자치적 실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금껏 그래 왔지만 정부와의 협조 하에서 남북교류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고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징검다리 혹은 마중물의 역할이든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Q 영국 런던 정경대 대학원에서 ‘한반도 통일과 정치문제’를 주제로 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A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간 갈등 완화와 평화 공존의 수단이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또 경기북부에는 DMZ의 평화적 활용, 안전감 수계 관리, 한강하구 개발, 접경지역 방역 등 북한과 협력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분야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경기도가 남북교류와 협력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는 대립과 대치의 결전장에서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앞으로도 경기도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제시하고 한반도 통일시대의 중추로 자리 잡을 것이고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징검다리 혹은 마중물의 역할이든 어떤 역할도

김창희기자

Kyeonggi interview

“남북 개성공단 반드시 열어야”… ‘재가동 촉구’ 커지는 목소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 “포기 않을 것”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재단 이사장
“한국경제 구조적 저성장 탈출 도움”
이재강 道 평화부지사도 ‘동조’

단이 두 개, 세 개, 네 개가 (운영되면 한국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을 벗어날 수 있다”며 “제조위기는 바로 사라진다. (개성공단이 재 운영된다면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을 다시 압도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많다”고 언급했다.

4년여 간 운영이 중단된 남북 개성공단을 재가동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개성공단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이 장관과 김 이사장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개성공업기협협회 회장단과 만나 “대북제재 문제가 작동하고 있어 여러 가지 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 어려움을 풀고 해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부지사는 “20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의 최대 결실은 남북경협의 욕동자로 불렸던 개성공단이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철수하라는 ‘말’ 한마디에 어이없게 문을 닫은지도 벌써 4년이다. 어차구니가 없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과) 인도적 협력 같은 것들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 이런 가운데 나온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북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제재와 미국 독자제재로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김 이사장은 대북제재가 문제라면 남한의 임가공단지였던 개성공단을 북한 내수시장으로 방향을 틀리라고 제안한다”며 “북한의 원부자재로 제품을 만들어 북한 내수시장에 풀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현물로 받자는 것이다. 이인영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 확장판인 셈이다”고 말하며 이는 꼭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된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SNS 방송에서 “개성공단은 평화도 만들고 경제부양을 만들어 얼마아마한 돈을 벌었다. 그런 개성공

씨는 가자

내년 경기도체육대회 임진각서 ‘불꽃 열정’

파주시, 슬로건 선정·엠블럼 개발
TF 인력 보강·내달 조직위 구성
80억 들여 25개 체육시설 개선
실향민·北 선수단 초청 계획도



2021년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식이 열리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내년 5월 예정된 ‘2021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23일 도민체전 개최로 최종 결정된 뒤 지난 6월 5~25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3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슬로건으로 ‘평화도시 파주에서, 하나 되는 뜨거운 열정’을 선정했다. 또 제11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슬로건으로 ‘나누는 우정, 하나 된 감동, 평화의 파주’를 선정하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고양시 등 국제

규격 경기장을 갖춘 자치단체 벤치마킹에 이어 2월에는 관내 공공체육시설 현장 점검과 종목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3월 ‘2021년 도민체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도민체전 ‘파스코트’와 ‘엠블럼’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 달에는 최종한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유관 기관장, 사회단체장 등 150명 내외의 ‘경기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

현재 운영 중인 ‘경기 도민체전 TF 팀’도 4명에서 8명으로 보강하고 경기도체육회와 종목별 경기장 점검도 시작한다.

시는 경기장으로 사용될 25개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60억원, 시비 20억원 등 총 80억원을 편성해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경기장 시설개선과 육상트랙, 수영장 등 공인 절차를 오는 11월 중으로

끝내고 내년 1월 개·폐회식 운영사 선정과 대회 홈페이지 구축 등 대회 홍보 강화에 들어간다. 이어 내년 3월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끝낸 뒤 내년 4월께 자원봉사자 결단식 및 최종 점검을 거쳐 도민체전 개최 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파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내년 도민체전은 5월 12~15일, 도장애인체전은 5월 27~29일, 도생활체육대축전은 10월 1~4일, 도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은 10월 7~8일 각각 개최된다.

시는 도민체전 사상 최초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회식을 열고 개성시·개풍군·장단군·연천군 등 미수복 경기도 실향민과 북한 선수단 초청으로 남북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 계획이다.

최종한 시장은 “내년 도민체전은 한반도 평화의 중심 파주에서 1천360만 경기도민이 우정을 나누고 감동으로 하나 돼 화합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성공적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민의 화합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집에서 봐도 느껴지는 파주·연천 생생한 생태현장

경기문화재단 '접경지역 주민 아카데미'

10일부터 DMZ 정보 공유의 장
북한과 공동보존 평화조성 기여
16일까지 GGC 멤버스 신청 가능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원장 장덕호)이 오는 10일부터 한반도 DMZ 세계유산 등재 기반구축을 위한 '접경지역 주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접경지역 주민 아카데미'는 파주시·연천군 등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반도 DMZ의 평화 및 세계유산적 가치 확산을 위한 지역민 교육의 장이다.

문화재청과 경기도·강원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연구원이 주관하며, 파주시·연천군이 후원한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전쟁의 긴장감이 팽팽하다.

또 약 70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옛 선조의 문화유산 및 천혜의 자연유산이 고스



란히 남겨진 공간이기도하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9년 문화재청, 강원도와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반도 DMZ 실태조사단'을 출범해 DMZ를 형성하는 문화·자연·평화요소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가 이미지 홍보 및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접경지역의 특성상 북한과의 공동보존·관리 작업을 통해 평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DMZ와 세계유산에 대하여 지역민들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기획됐으며, 경기문화재단은 접경지역이 갖는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평화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국립생태원을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 경기연구원,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속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온라인 실시

간 송출(스트리밍)식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실시되지만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수강생과 강사 간 소통이 가능하고, 파주·연천의 생태 현장을 담은 사전 녹화본 상영 및 관련 좌담회를 통해 집안에서 생태 현장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경기도 내 DMZ접경지역인 파주시와 연천군 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선착순으로 일반인 접수도 가능하다.

경기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지씨씨 멤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강신청은 오는 16일 오후 11시59분에 마감된다. 온라인 실시간 강의는 오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한 회차당 정원 100명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가량 진행된다. 교재는 수강생 주소로 우편 발송되며, 9주 간 교육 중 70%(6주) 이상을 이수한 경우 수료증이 발급된다.

경기문화재연구원 DMZ 주민 아카데미 담당자는 "주민들과 함께 한반도 DMZ가 지닌 가치를 나누고, 긴장어린 접경지역에 평화를 조성하는 작은 발걸음이 됐으면 한다"면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신연경 기자